

광주 소각장 조성 ‘큰 산’ 넘나

최종 입지 선정 앞두고 광산구 삼거동에서 내일 주민설명회
주민 강력 반발 예고...인센티브 제공 설득 이끌어낼지 주목

2030년까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광주시가 최종 입지 결정을 앞두고 26일 법정 절차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3면>
소각장 최종 후보지(광산구 삼거동 산 77-9번지 일대·8만3700㎡ 부지) 인근 주민들이 강도 높은 반발을 예고해 광주시가 주민과 소통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바탕으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각장 전락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26일 오후 2시 광주시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소각장 설치에 따른 입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게 될 평가서 초안을 주민에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환경법에 규정에 된 절차다.

평가서 초안은 동물상(조류), 대기환경, 악취, 토양, 수질(지표·지하수),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조사 방향을 담고 있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 5일부터 광주시청사 안내데스크,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삼도동행정복지센터, 평동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도시미화과, 나주노안면행정복지센터,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함평 월야면사무소 등 8곳에 비치돼 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열람은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며, 열람기간인 26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쓰레기 직매입 금지 조치에 따라 2022년 소각장 설치계획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모를 진행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들 반발로 인해 번번히 실패했다.

지난해 8월 광주시는 “선(先) 자치구 신청, 후

(後) 광주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하고 3차 공모를 진행해 6개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광주시 서구 서창, 광산구 동산·삼거·지평동 등지를 조사해 지난해 12월 삼거동을 최적지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방향성을 정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해 이달부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설명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산구 삼거동 주민들은 26일 오전 광주시청과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삼거동 소각장 부지 유치 신청 반려”를 촉구하는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소각장 설립예정지 인근에 요양병원 기숙사와 종교시설이 있어 이곳에 위장 전입 의심이 있으나 광주시가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대대로 지켜온 주민들의 삶터에 유해시설 설치하는 안된다”고 밝혔다.

시는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예정된 소각장 조성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민의견 절차 종료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9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분안 협의를 마치고 올해 연말 안에 소각장 입지를 최종 결정하고 고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결정적인 하자나 변수가 없다면 2026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계획을 거쳐 2029년 완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설득한다는 각오로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4일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종 후보지 일대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담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며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간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초강수 행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된다.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법가’ 한비자의 경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검토

퇴직연금공단 신설 추진
‘목돈’ 퇴직금 사라질 듯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시간에 의무화할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

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불량 어도, 지금처럼 정비하면 20년 걸린다 ▶6면

KIA 박찬호 “동료들 믿고 가을 준비” ▶18면

일하는 청년 - 광주시립수목원 청년 공무원 ▶22면

월간 농협맛집

하얗게만 먹던 밥
이제 균형을 담다

왜? 잡곡밥은 맛없고 불편해야 할까요?
더 맛있고 건강한 새로운 쌀식생활을 선보입니다

균형미 500g
무료체험
드셔보시면 달라요
※ 배송비 별도